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난달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에서 '불교체험관' 개관식이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종교문화 · 관광 · 힐링 '3色 화음의 결정체'

고창 선운사 불교체험관 개관

고창 '선운사'에 불교문화체험 · 관광 · 힐링을 위한 공간인 '불교 체험관'이 개관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에서 '불교체험관' 개관식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불교체험관은 지난 2018년부터 총 50억 원(국비 20, 지방비 25, 자담 5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7월 준공됐다. 석전 박한영 스님을 추모하는 전시체험관의 전시물 배치 등을 마무리하고 첫선을 보였다.

도는 체험관이 건립되기까지 고창군, 선운사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불교 체험관은 선운사의 암자인 도솔암 가는 길목 2개소에 자리잡았다.

템플스테이관 인근에 명상 · 다도체험관을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 전시체험관(이하 석전기념관)을 배치해 도솔암의 자연 속에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푸르게 펼쳐진 차밭과 맑은 물이 흐르는 도솔천이 어우러진 곳에서 명상과 다도를 즐기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를 받고, 석전기념관에서는 구한말~일제강점기 시기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 · 문화가로 널리 알려진 석전 박한영 스님의 발자취를 밟을 수 있다.

선운사는 1,5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동백 · 꽃무릇 · 애기단풍 등 사시사철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승고찰이다. 여기에 불교 체험관까지 더해져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체험관이 개관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고창=김영식기자

산업위기대응 지정기간 연장 확정

군산지역에 1년 더 혜택 주어져... 기업들에 '큰 힘' 예상
자동차 · 조선산업 재건 위한 노력에 정부 연장 필요성 공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던 군산지역이 앞으로 1년 더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이 주어질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오는 4일 만료를 앞두고 1년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총 5년간 지정된 셈이며, 위기지역 연장지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기업들에게 1년간 더 주어지게 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군산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연장을 위한 TF를 구성, 그동안 5차례 TF를

가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TF에는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해 전북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등 도내 연구기관의 산업진단 전문가로 꾸려졌다.

TF는 심도있는 경제지표 분석과 기업방문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있는 논리를 담은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지난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도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지난달 10일 현장 실사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군산경제 회복세에 탄력을 불어주기 위해서는 위기지역 연장을 통해 좀더 지원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기차 클러스터 등 대체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가 위기지역 연장지정에 힘을 쏟아온 이유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자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고도화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추가 고용장려금이 확대되고, 신규투자시 세제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확대되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국가예산 사업도 추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도와 군산시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지난 4년간 신규 기업유치시 지부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와 더불어,

국가예산 사업도 다양하게 지원됐다.

이러한 정부지원 아래 전기차클러스터를 기반으로한 '군산 상생형일자리', 2023년 재가동을 골자로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 등 전북도와 군산시의 자동차,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노력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동안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파나는 노력으로 지역경제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번 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계기로 지역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도 공직자윤리위, 올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관할 공개 대상자 200명에 대한 2022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전북도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시 · 군 의원198명이다.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 · 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내역이 모두 포함됐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 · 군 의원 등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0명의 공개 내역은 전북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

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7억 4,048만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5.155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0명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가 73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미만이 31명(15.5%), 2억원 이상 보유자도 13명(6.5%)이다.

재산 증가자는 152명(76%), 재산 감소자는 48명(24%)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5.2%p 증가, 감소자는 5.2%p 감소했다.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시가격, 추가 상승 등 가격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다. 감소사유는 생활비 · 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외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신고됐다.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모든 공개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김제시

농경문화체험 1번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벽골제